

제305회대구광역시의회(정례회)

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차(부록)

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

【검토보고서】

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발의일자 : 2023년 11월 17일
- 발 의 자 : 박소영 · 권기훈 · 김재용 · 김재우 · 김지만 · 김태우 ·
류종우 · 박우근 · 박종필 · 육정미 · 이동욱 · 이재화 ·
임인환 · 하병문 · 허시영 의원
-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현재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외벽에 표시된 상호 및 동수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창의적인 광고물 제작을 위한 규제 개선,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근거 마련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을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하고 벽면이용간판 세부 표시방법 마련(안 제2조 · 제5조)
- 광고물 바탕색 관련 규제 삭제(안 제3조 · 제12조)
-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운영 근거 마련(안 제21조의2)
-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관련 규정 정비(안 제22조)
-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표시·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심의 근거 마련(안 제23조)
-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명 정비(안 별표 5)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광고물 바탕색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.
- 안 제2조제2항제8호와 안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공장 등의 주명칭, 동 번호, 상징형도안 각 1개씩을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주명칭 등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였는데,

이는 3개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공동주택, 의료시설 등의 경우 동 번호 표시 등이 간판 총수량 한도인 3개를 초과하게 되어 현행 법령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의 세부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,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안 제3조제3호와 안 제12조제3호는 광고물등의 바탕색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, 다채롭고 창의적인 광고물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.
- 안 제21조의2에서 시장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점검반의 운영을 위해 합동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, 점검계획은 법 제5조의2¹⁾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는데,

1)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

- ① 생략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(이하 생략)
-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·군·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·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.
- ④ ~ ⑥ 생략

이는 불법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며 보다 철저한 불법광고물 점검 및 단속으로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다만, 안 제21조의2제1항에서의 ‘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’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‘합동점검 및 기동정비반’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명칭을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으며, 불법광고물 합동점검계획을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대구시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속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22조제2항에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(이하 “시 심의위원회”라 함)의 심의안건 처리기간을 15일(소위원회는 10일)에서 20일로 변경한 것은 법 제3조제9항2)의 처리기간과 일치시킨 것이며, 처리기간 연장을 1회 15일(소위원회는 10일) 이내에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였고, 안 제22조제8항은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과 처리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.

2)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

-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·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·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안 제23조제1항제3호에서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 표시·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에 관한 사항을 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한 것으로,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광고물등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그 외 개정 사항은 타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.
- 이상으로,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